

문 대통령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탄력받나

북-러, 정상회담서 철도 연결 '공감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경제 협력 방안이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남북러 철도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와 깊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북러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연결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한을 통해 남한으로 향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남북한연결철도(TKR)는 부산에서 나진까지 남북한 총연장 1295km 구간을 철도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TKR이 완성되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러시아를 관통하는 총 9297km 길이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이 가능하다.

이는 다시 유라시아횡단철도와 이어질 수 있다.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유럽까지 한 번에 달을 수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뒤 사

회자와의 일문일답에서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유럽으로, 런던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며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TKR-TSR 연결사업은 비단 일반여

이는 극동지역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신(新) 동방정책'과 문 대통령의 '신 북방정책'을 연계해 한러 간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나인브릿지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푸틴 "남북·시베리아철도 연결 논의"...의지 표명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유럽까지 한 번에 가능
극동지역 개발 공들이는 푸틴 新북방정책과 연계
철도 연결 중심 경제공동체 조성→안보공동체로
각국 이해관계 걸린 경제 매개로 평화 유지 개념**

객 운송 뿐 아니라 화물 운송의 시간·비용의 막대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러 3각 협력분야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두 차례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러 철도연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에서 다시금 TKR-TSR 연결사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닌 원론적 수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북러 철도 연결구상은 철도공동체를 안보공동체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처음 공개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에 미국까지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를 말한다. 우선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점차 안보공동체로 넓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의 출발점이 된 '유럽식단 철도공동체'를 모티브로 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제 매개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남북한연결철도(TKR)가 완성되면, 이를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해 중국·몽골·러시아까지 하나로 묶겠다는 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뼈대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개성)과 동해선(제진-금강산)에 각각 공동연구조사단을 파견, 노후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닌 원론적 수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는 남북 철도연결의 첫 발은 댄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가 북한·중국·러시아, 동유럽국가 등 28개국 이 모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기본적인 여건은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 공동연구조사단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차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에 애를 먹은 데서 보듯 실질적인 보수공사 단계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사업들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생각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여러가지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를 수 없을 것 같다"며 "인내를 갖고 조금 참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철도 연결을 비롯한 모든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가 해결된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남북 정상이나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동학혁명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

유성엽·김종희 의원
내달 2일 공동특강

민주평화당 유성엽·김종희 의원은 "5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제로 공동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발발 125년만의 국가기념일(5월11일) 제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동학이 갖는 역사적 가치와 현대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특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강이 그간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됐던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사상 전문가인 김종희 국회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이 한국·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40년 동안 전동학문을 해온 유학자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의미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 ▲동아시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세계적 의미 등 평소 갖고 있던 철학과 소신을 청중들에게 설교할 예정이다.

공동특강자로 나선 유성엽 의원은 '국가기념일 제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청중들에게 공개한다.

동학농민혁명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기까지 그동안 기념일제정을 놓고 전라북도 4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한 그 뒷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DMZ 평화의 길 입장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오늘부터 문 정부 2년 성과 점검

8개 대통령직속 자문위

8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뤄진 국정과제협의회(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가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책 행사 개최를 통해 그간의 공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국정과제협의회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주에 걸쳐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정책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정과제협의회는 '2년의 변화, 3년

의 희망'을 주제로 정책 행사를 열어 그간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국민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 3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정과제협의회에 속한 8개 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일자리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교육회의·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이다. /뉴시스

미래재정위기 대비 기금 조성 제안·조례 제정 이끌어

'세무사 출신 전문성 발휘' 김기영 도의원, 의정활동 돋보여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행정자치위원회)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세무사 출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재정수입 불균형과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3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여유재원 발생시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대형 산불이나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에 집행부에 기금조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4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됐다. 김기영 의원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운명을 펼쳐야 한다"며 "조례 제정과 기금조성으로 전라북도 재정운명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제6회 전국 품바명인전

2019년 5월 3일(금) 오후 6시 30분
전주 흥남문 광장

주 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공동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사
후원 | 전주시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8-9700